

#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 최소 10억”

정호윤 도의원 “서울 등은 공익적 활용”  
내일 본회의서 활용방안 마련 촉구 예정

도내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남은 소액의 장기 미사용 선수금이 최소 10억 원에서 1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를 환수해서 공익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은 “2015년 기준 도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는 7억 5천만원 수준이었다”면서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10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환수해서 공익적 사업

에 투자하고 있는 타 지역 사례와 달리 전북도에서는 미사용 선수금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잠자고 있는 돈’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호윤 위원장은 “미사용 선수금과 여기에 붙은 이자액을 활용해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무상 제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서울시나 장학사업에 활용하는 경기도, 대중교통시스템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는 광주시 등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하면서 “전북도가 타 지자체의 사례만이라도 벤치마킹 하려는 최소한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정호윤 위원장은 2015년 5분발언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전북도는 여전히 장기 미사용 선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별다른 대책 없이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면피성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호윤 위원장은 20일 예정된 37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장기 미사용 선수금 환수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민주, 2차 추경·재난소득 검토 본격화

“2008년 금융위기 비교하면 추경 규모 충분히 않다” 판단  
당정책, 2차 추경 편성 필요성 공감... 총선 후 처리 검토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활발... 이낙연 “지자체장 결단 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섰다. 코로나19가 전세계 경제를 휩쓸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추경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때 2조8000억원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금융시장의 동요와 외환과 실물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해결하고 통화스와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외의 상황도 면밀히 살펴면서 보다 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광문 최고위원은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여당) 여전히 정부 추경을 ‘충선용’이라고 트집잡고 있는데 대단히 정략적·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민의 삶에 투입된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경제위기는 전 지구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도 당정책은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하는 대화들은 있었다”며 “지자체장단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6조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추경 규모를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재정당국도 추경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1조7000억원+알파(α)’는 불발됐다. /뉴스

이에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 논의가 시작됐을 때보다도 더 많은 계층과 산업 분야로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4·15 총선 전에 2차 추경을 위한 국회가 한번 더 열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기간 동안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하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재난기본소득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당은 당장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잠시 뒤로 미뤄두자는 입장이었지만 추경 통과를 계기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위원장은 당정책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정책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시범이 될 수 있다. 지자체들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의 현금성 지원이 성공적 성과를 거둔다면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살리는 지자체 차원의 결단에 따른 부담이 생긴다면 다음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뉴스

###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 김윤덕, '조선역사문화단지' 조성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전주갑)는 자신의 블로그에 전주문화관광육성과 관련해 '조선역사문화단지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해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기를 맞은 한옥마을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제2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른 공약으로 한옥마을과 구도심 일원에 ‘조선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해 찬란했던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전수에 재현하고 관광 상품화 하여 국내·외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김광수, 지역·민생경제 살리기 비전 약속

민생당 김광수 예비후보(전주갑)가 18일 “이번 총선 공약의 핵심은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있다”며 “일 잘하는 김광수가 전주와 전북 지역경제를 살리는 김·광·수가 되겠다”는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광수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생경제 살리기에 대한 비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중심도시 전주 ▲341 관광도시 전주 ▲수소·탄소 미래산업도시 전주 등 3가지 실천안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 조형철 “대한방직터, 도심 산업단지로”

민생당 조형철 예비후보(전주을)가 전주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전주 대한방직 부지 활용과 관련해, ‘절단 도시 산업단지’ 조성 카드를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대한방직 부지의 현 개발 계획을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이곳에 ‘절단 도심 산업단지’를 조성해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절단 도심 산업단지의 모델은 한때 구로공단이자 지금은 대한민국 디지털산업 선도지인 루로디지털산업단지”라며 “대한방직 부지를 절단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최형재, 좋은 정치 위한 '2차 형재펀드' 출시

무소속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을)는 선거펀드인 ‘형재펀드’가 완판돼 2차 펀드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난 9일 5000만원을 목표로 출시한 ‘형재펀드’가 온라인(bfund.kr/brother)과 오프라인(캠포 방문신청)을 통해 진행돼, 일주일만인 17일에 목표액을 채우고 1차 마감했다. 최 후보는 “마감된 후에도 미처 투자하지 못한 다수의 지지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계속돼 2차출시를 즉시 시작했다”면서 “2차 ‘형재펀드’는 18일부터 목표 금액 5000만원으로 완료시까지 진행되며 투자 방법은 1차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김성주,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정관협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전주병)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덜고 세계적 상용차 생산기지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대차 발전을 위한 노사정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의 수소경제거점도시 지정과 더불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탄소수소경제를 통해 현대자동차 등 전북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 신영대, '민주 탈당 무소속 후보 복당 불허' 지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예비후보(군산)가 18일 “이해찬 당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 무소속 출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 대표의 발표는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연한 결단”이라며 “지난날 보수 세력에 가담해서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시민을 우롱하는 알박한 속임수”라고 질타했다. /특별취재반



#### 조배숙,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공약 제시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익산을)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조 후보는 18일 오전 11시 익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의 근간인 700만 소상공인의 삶이 벼랑 끝에 놓였다”며, “특히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저소득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시한 공약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저소득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과 고용보험료 면제 추진, ▲식자재 구입 긴급바우처 제도 및 소상공인 구매전용 카드 도입, ▲소상공인 재기지원 센터 설치 등이 있다. /특별취재반



#### 임정엽 “무노동무임금으로 일하는 국회 조성을”

임정엽 원무진장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맨다. 임 예비후보는 18일 “여야 각 당은 지난 2016년 5월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결의를 다졌다”며 “그러나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4%로 17대 국회 50%, 18대 국회 44%, 19대 국회 4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놀고먹는 국회의원 퇴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막달 국회의원 퇴출하는 ‘국민 배심원제’ 도입, ▲상시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총선 정당별 10대정책 공개

민주 ‘벤처 강국’·민생 ‘코로나 피해 지원’ 등

오는 4·15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의 10대 정책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순위 정책으로 벤처 4대 강국을 실현’을 내세웠고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민생당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 지원 및 극복 수단 지급’ ▲정의당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미래한국당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 ▲국민의당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에 일하는 정치 실현’ ▲민중당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자유공화당 ‘헌법개정국민발안권개헌 지지, 이승만·박정희·박근혜 계승’ ▲친박신당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개헌반대’ 등이 정당의 1순위 정책으로 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이날부터 정책·공약알리미에 공개하고,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 선거공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등록정당 47개 중 40개 정당이 10대 정책을 제

출했다. 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안전망과 자생력 강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건강먹거리 공급 등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에 이어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개인의 성장과 공정한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자유시장, 내 집 마련 등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달 19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하기’를 통해 제안된 유권자 희망 공약을 E-Book으로 제작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

## 총선 개표 참관인 공개 모집 ‘선거권자 누구나 신청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총선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개표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개표 참관인을 신청하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 선거법 제181조제1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선거 당일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뉴스